

POLITICS

2025년 8월 13일 수요일

“반복되는 상수도 누수, 다각적인 대책 마련”

“정원박람회 용역비 은닉 의혹”
김문수 의원, 진상규명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사진)은 지난 8일 전남도를 통해 순천시에 공식 요청한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문화행사 대행 용역 집행 내역’이 제출되지 않은 데 대해 12일 “순천시가 기록물 관리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 자료는 단순한 예산 집행 내역을 넘어, 박람회 개막식 총감독이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알려진 한경아 씨였다는 언론 보도 이후 제기된 각종 특혜·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핵심 근거”라며 “총 117억8373만원이 투입된 문화행사 예산의 세부 집행 흐름이 공개되어야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순천시는 이에 대해 “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청산돼 집행 내역을 관리할 주체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를 통해 국가기록원에 이를 확인한 결과, 국가기록원은 “조직위가 지난해 10월 청산된 이후 관련 기록물 관리 등 사무는 순천만국제정원을 운영하는 순천시가 승계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따라서 해당 자료는 순천시가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공식 전달했다.

김 의원은 “조직위가 사라져도 공공기록물은 승계 기관이 법적 책임을 지고 보관·관리해야 한다”며 “집행 내역 비공개는 명백한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1조는 기록물을 은닉·유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무단 폐기 시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



강기정 시장, 지하철 상수도관 사고 현장에서 주민들 만나
전문가 자문 등 합동조사…“피해보상 절차 신속히 진행”

강기정 광주시장이 반복된 지하철 상수도 누수사고에 따른 피해 상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피해 대책 마련 및 보상을 약속했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 시장은 이날 최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중 발생한 금호동 상수도 누수사고 현장을 찾아 피해 상인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강 시장을 비롯해 시민안전실장, 도시철도건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와 피해 상인들이 참여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오전 6시 13분 금호동 도시철도 2호선 2공구 공사 현장 내 직경 600mm 노후 상수도관의 이음부가 이탈돼 누수가 발생, 인근 상가 12곳이 피해를 입었다.

음식점 내 식재료는 흘러들어 온 물로 사용도 하지 못하고 버려야 했고, 옷 가게의 물품은 모두 젖은 상태였다. 일부 상가의 경우 인도가 무너지면서 통행조차 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

면담 전 누수사고 현장을 찾은 강 시장은 주변 상가를 일일이 돌며 피해 현황을 경청했다.

이후 강 시장은 공사 관계자의 상수도

관 파손 현장 상황 관련 브리핑을 듣고 피해 상인들과의 면담 자리로 이동했다.

“현장을 늦게 찾아 죄송하다”는 강 시장의 말과 함께 시작된 면담은 40여분 간 이어졌다.

상인들은 “도시철도 공사로 인한 매출 감소에 이어 침수 사고까지 겹쳐 어려움이 가중됐다”며 충분한 피해보상, 보상금 신속 지급, 도시철도 공사로 인해 좁아진 출입구 앞 통로에 대한 대책 등을 요청했다.

한 상인은 “잇따른 누수 사고로 가게 안으로 들어 온 물을 빼내고 잔해를 치우는 데 며칠이 걸렸다”며 “이 같은 사고가 또 없으리란 법이 없다. 피해가 너무 크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피해 보상을 해준다고 하지만 얼마나 걸릴지, 피해 상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보상이 이뤄질지 알 수가 없다”며 “보상 금액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피해를 복구하는데 빚을 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상인은 “반복된 사고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다. 사고 당시 직격탄을 맞은 가게는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지만 손해사정사를 통해 피해 보상은 납득할 수 없다”고 전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12일 오전 서구 금호동 도시철도2호선 상수도 누수피해 현장을 찾아 복구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피해 상인들의 호소에 안행주 서구의원도 힘을 보탤다.

안 의원은 “공공의 이익 때문에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많다. 하지만 대부분 ‘방안을 찾아보겠다’, ‘지원에 나서겠다’ 등 말뿐이다”며 “각자의 사정이 다르지만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라도 현실적인 지원 방안과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 시장은 상인들의 공사로 인한

피해 최소화, 피해 손실 현실화 등을 약속했다.

강 시장은 “현실과 차이가 있는 법적인 보상체계는 상인들의 상처 받은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조금이라도 상인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또 상인들의 통행로 불편 등 안전 우려에 대해 통로 확대 및 전동 추가

설치 등 빠른 시일 내 시정조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 즉각 이행할 것을 지시했다.

간담회에서는 공사 추후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도 진행됐다. 현재 해당 공사구간은 상인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광역케이블 이설 등 중간에만 가능한 작업을 제외하고 야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윤용성 기자 yot1404@gwangnam.co.kr

‘지방시대위’ 기능 강화…균형발전 예산 사전조정권 부여

국가균형성장전략회의 신설…지역투자협약 활성화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국가 균형성장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위원회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예산 사전조정권을 부여하고, 지특회계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초광역권 전용계정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는 △거버넌스 구축 △재정 분권 확대 △제도 구조 혁신을 3대 축으로 한 국가균형 성장전략을 제시했다.

현재 14조7000억원 규모인 지특회계는 비수도권 지원과 지역격차 완화를 위한 핵심 재원으로, 지역자율계정·지역지원계정·제주계정·세종계정 등 4개 계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여기에 초광역권이 직접 사업을 계획·집행할 수 있는 ‘초광역권 계정’을 새로 만들고, 중앙부처 보조금을 지특회계 자율계정으로 이관해 지방 자율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계획하면 국가가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지역투자협약’ 제도를 활성화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중앙 주도형 지원 체계를 지역 주도형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실질적 조정·배분 권한을 행사하게 되면,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정운영계획에는 대통령 주재 ‘국가균형성장전략회의’ 신설 방안도 포함됐다. 앞서 정부가 제시한 ‘5국 3특 전략’의 5국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충북권·호

남권 등 5대 초광역권을 의미하며, 초광역권 계정 신설로 해당 전략 추진에도 속도감이 붙을 전망이다. 3특은 특화발전지구로, 각 권역의 산업·관광·문화 역량을 극대화하는 맞춤형 발전 전략을 담고 있다.

특구 제도 개편도 추진된다. 현재 87종·2437개로 난립한 특구를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부처별 칸막이식 공모사업은 지정공모제·통합플랫폼 방식으로 개선한다. 이를 통해 유사·중복 사업을 줄이고,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시·도별 7대 공약과 15대 추진과제를 구체화하고, ‘우리동네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226개 시·군·구가 제출한 사업을 국정운영계획에 반영했다. 기초 지자체별 제안이 정부 운영계획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역 의견이 중앙 정책에 직접 반영되는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조국혁신당, 당 진로·조국 행보 오늘 당무위서 논의

조기 전당대회 절차·지방선거 전략 등 다룰 듯

조국혁신당은 13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조국 전 대표의 특별 사면·복권 이후의 당 진로를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당무위 주요 안건은 새로운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조기 전당대회 개최와 내년 지방 전략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백선희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과 조 전 대표의 행보는 내일 당무위에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 지도부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임기를 단축하려면 지도부의 사퇴 결의와 최고위원회 의결, 당무위 인준, 전 당원 투표 등을 절차를 거쳐야 한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현 지도부 임기 단축에 대해) 우선 당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쭙 봐야 할 것 같다”며 “당무위, 최고위에서 계속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 전략에 대해서도 의견 조율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서양진 원내대표는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은 다시 개혁의 불꽃을 군데군데 잡으라는 시대의 명확한 요구”라며 “조국혁신당 2.0 시대를 열고 민주 진보 진영의 압도적 승리를 위한 지방선거 전략 수립에 본격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사회민주당과 공동 발의한 ‘검찰청 오남용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 전 대표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가능성도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아직 본회의 통과는 아직이지만 법안에 따르면 진상규명, 일종의 제조사 결과에 따라 재심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와 관련해 “저희가 추진하는 법에 따라 조국 대표뿐 아니라 다른 많은 분도 재심받으실 수 있길 바란다”며 특별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조 전 대표는 출소 후 당원·지지자들과 만나 감사 인사를 전하는 한편 검찰을 비롯한 정부의 개혁 과제에 대해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 권한대행은 “(조 전 대표가) 이제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검찰·사법 개혁에 대해 더 구체적인 목소리를 내출 것으로 기대한다”며 “감사위·언론 개혁에 대해서도 계속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당론으로 계속 가져가고 있는 반헌법행위조사 특별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조 (전) 대표가 더 잘할 수 있는 역할”이라며 “새로운 사회 비전에 대해 말씀을 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성오 기자 solee235@

후-트럼프 첫 정상회담 의제는?

대미투자·비관세…‘마스가’ 진척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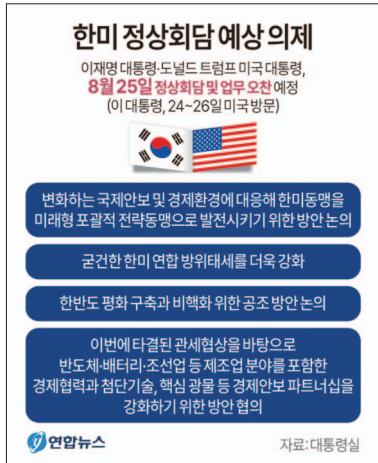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첫 정상회담이 오는 25일로 확정되면서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통상 분야 의제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채울지가 관건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양 정상은 어떤 논의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아울러 ‘마스가’(MASGA) 프로젝트 명명한 한미 조선 산업 협력 사업을 비롯해 반도체, 배터리 등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의 논의 항배에도 관심이 쏠린다.

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4~26일 미국을 방문해 25일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최근 타결된 관세 협상을 바탕으로 반도체, 배터리, 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경제협력과 첨단 기술, 핵심 광물 등 경제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는 지난달 30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타결한 관세 협상을 통해 미



국에 예고한 대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자동차에 부과 중인 25%의 품목관세를 15%로 하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합의됐다.

양국은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 큰 틀에서 합의를 본 상태지만, 각론에까지 모두 세세하게 합의한 것은 아니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투자 분야와 시기, 형태에 대한 논의가 진전될지 주목된다.

한편,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는 한국 주요 기업들이 이번 방미에 경제 사절단으로 동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추가로 ‘투자 보따리’를 풀 어놓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연합뉴스

해남 솔라시도 AI 슈퍼클러스터 사업 난항

전남 해남 솔라시도에 구축될 예정인 150억원 규모 AI 슈퍼 클러스터 허브 사업이 난항에 빠졌다. 투자사가 약속했던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서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투자 그룹 스톱팜 로드의 자회사인 퍼힐스(FIR HILLS) 관계자들은 지난 9일 입국해 도 관계자를 만나 자금 조달 상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며 계약 연장을 요청했다.

전남도는 퍼힐스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본계약 체결 시점을 6개월 유예하기로 하고 세부 진행 상황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퍼힐스는 당초 3GW 규모의 데이터센터와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구

축하는 데 총 15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지만, 현재까지 확보한 투자금은 10억 달러(약 1조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AI 슈퍼클러스터의 중추 시설인 데이터센터를 주로 이용할 엔드 유저(End-user·최종사용자)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퍼힐스의 제안을 받아들여 본계약을 유예했다.

전남도는 퍼힐스가 지속적으로 투자자를 물색하고 있다는 점과 정부의 재선에너지 확대 정책이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사업이 무산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